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

2010. 4. 13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캠페인단

[국회의원 홍희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환경정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조, 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인사발언>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3. <경과보고> 공공노조
4. <기자회견문 발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5. <연대발언> 고정근(환경정의 국장)
6. <연대발언> 이태기(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장화위원회 위원장)
7. 사진설명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경과보고]

쓰레기의 수집과 처리는 시대에 따라 그 역할과 목적이 달라졌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는 쓰레기 처리가 질병예방의 수단이었고, 산업혁명시기에는 원활한 교통과 물류이동을 위해 거리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목적이 있었다. 거리의 미관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보건학적, 산업적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21세기 오늘, 환경미화원은 어떤 존재일까? 환경미화원은 더 이상 거리의 미화나 지역의 위생을 담당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자원순환(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생산의 영역에서 쓰레기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포장을 억제시키거나, 주민의 역할로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 및 분류하여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순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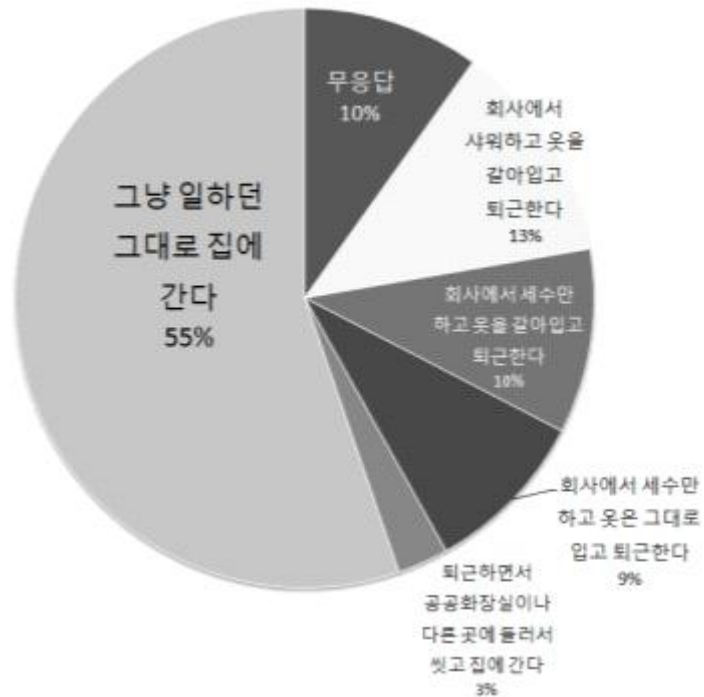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한 직업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나 소방관보다 환경미화원의 산재사망률이 더 높다.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중 위험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고, 유독가스를 마셔 병에 걸릴 것을 예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에는 그에 합당한 대우와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확산되었다. 덴마크에서는 2000년까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인력증강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사고나 미생물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노동부가 5개년간 공동의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분리수거와 쓰레기 재활용이 잘 이루

어지는 것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간회사들이 지자체로부터 정해진 금액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다음,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깎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휴게실 등 기본적 복지시설에 들어갈 투자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려했기 때문이다.

2009년 5개 조직이 모여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공공노조, 그리고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50개 사업장과 105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정부, 평택, 구리, 종로 지역의 4개 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율을 계산해 본 결과 11.85였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재해율인 0.7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민간위탁 회사들만의 재해율은 16.8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고의 문제 이외에도 환경미화원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작업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집으로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생물에 의한 여러 가지 오염을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 환경미화원들의 얼굴과 의복에서 미생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여 작업후 샤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작업복과 출.퇴근복을 구분하여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로 드러났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락카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건강권강화를 위한 사업단(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공공노조,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심각한 근무조건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에게 환경미화원들의 씻을 권리 등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전국적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과보고 요약]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2008년 진행된 “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 놓기! 국민 캠페인”을 평가하면서 2010년 제2차 대국민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2009년 4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 사업으로 환경미화노동자 작업환경 및 건강권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2009년 5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공공노조, 민주연합노조, 홍희덕의원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여 환경미화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사업단(이하 사업단) 구성
-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0개 사업장과 1,050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정부, 평택, 구리, 종로 지역의 4개 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짐
- ※ 조사결과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율을 계산해 본 결과 11.85였음. 이는 우리나라 평균재해율인 0.7의 16배를 넘는 수준이며 특히, 민간 위탁 회사들만의 재해율은 16.8로 더욱 심각한 상황임
- 2010년 사업단 회의를 통해 환경미화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이란 슬로건을 세우고 국민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기자회견문]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노동자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전국 50개 사업장과 1,0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의정부, 평택, 구리, 종로 지역의 4개 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업 중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힌 경험이 하루에 세 번 이상 있었다는 분들이 42%나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먼지를 마시고 있으며, 이 먼지에 들어있는 미생물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작업 후 퇴근할 때, 그냥 일하던 그대로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집에 가는 분들이 55 %나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분들은 13 %밖에 안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입었던 옷 그대로 집에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2009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산업재해율은 0.7 %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장의 환경미화노동자 재해율은 6.9 %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미화노동자 재해율은 16.8 %나 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미화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전체노동자 그것의 16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단은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하여 환경미화노동자의 씻을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국민캠페인단을 출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캠페인단은 우선 환경미화노동자의 열악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모두가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조건을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뿐만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과 만나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통해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회 전국 40여개 도시에서 국민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환경미화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간위탁이 환경미화노동자의 건강을 더 위협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회사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아껴 이윤을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회사시설도 엉망이고, 회사나 차고지에 아예 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휴게실도 없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지역부터 지자체를 압박하는 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은 각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캠페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은 총체적인 의미로써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나아가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민캠페인단은 환경미화노동자가 자원순환의 지킴이로써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그에 걸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0. 4. 13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캠페인단